

보도일시

2025. 12. 4(목) 배포즉시

배포일시

2025. 12. 4.(목) 9:30

회의 개요

- 일시·장소 : 2025.12.4.(목) 7:30~8:30, 국회의원회관 211호
- 참석자
 - (黨) 김원이, 권향엽, 김동아, 박지혜, 송재봉, 오세희, 이재관, 정진욱, 허성무 위원
 - (政)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

- ☐ 오늘 더불어민주당 산중위정책조정위원회(위원장 김원이 의원)와 중소벤처기업부(한성숙 장관)는 당정협의를 가졌다.
- ☐ 당정은 중소벤처기업·소상공인 분야 국민체감 민생현안과 국정과제 성과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 법안,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추진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.

< 국민체감 민생정책 >

- ☐ 당정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'회복'을 넘어 '성장'하기 위한 민생 정책으로 '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'과 '소상공인 재기지원 추진계획'을 논의하였다.
- ☐ 먼저 AI·딥테크 시대를 선도할 유니콘·데카콘을 육성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견인할 핵심 국가 전략으로서 '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'을 논의하였다.

- AI·딥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·데카콘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, 모험자본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연 40조원 벤처투자 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.
- 또한 우수한 기술인재를 벤처 생태계로 흡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실패가 자산이 되는 재창업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, 지역벤처와 소셜벤처가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와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.
-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정협의를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과제를 구체화하고, 12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.

□ 당정은 최근 한계 소상공인이 늘어나고, 연체율·폐업 증가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.

-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경영진단과 재기 정책으로 연계하고, 채무조정 이전부터 재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.
- 또한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철거비 한도 향상,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단계별 폐업 지원을 강화하고,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는 등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.
- 당정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을 통해 주요 대책 과제의 법적 근거 명확화, 정책 추진 안정성·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.

〈 중점 추진 법안 〉

□ 당정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해 중점 법안*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였다.

* 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, 인공지능촉진법, 벤처투자법, 상생협력법 등

○ 먼저, 「탄소중립촉진법」, 「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」, 「인공지능촉진법」, 「기업승계특별법」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.

○ 「벤처투자법」은 해외 벤처자본의 유입 촉진을 위해 투자기업 선정부터 계약, 회수 등을 전담하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.

○ 그 외에도 소상공인 통계 기반 강화를 위한 「소상공인기본법」 개정안 등 국민 체감도가 높고 쟁점이 없는 법안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.

□ 또한 당정은 '26년 「상생협력법」 개정을 통해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, 불공정피해 기업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.

〈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추진계획 〉

□ 당정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주요 사안 중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.

○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조치하고, 특히 매년 반복 지적된 과제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당과 지속 협의하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당정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현안에 대해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정책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.

○ 우선, 온누리상품권이 ▲특정 업종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매출 이상 점포의 가맹을 제한하고, ▲부정유통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「전통시장법」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,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. 아울러 병·의원 등 전문업종에 대한 가맹 제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.

○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중심의 스마트공장 확대, 상생형 스마트공장 고도화 등 중소 제조기업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,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.

○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강력한 요청*에 대해서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위한 「상생협력법」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, 기술탈취 직권조사 도입, 제재 강화 등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* (주요내용) ①기술탈취행위 제재 강화, ②조정중재 제도 기능강화, ③손해액 산정의 현실화 및 징벌적 조치, ④기술탈취피해기업 구제 등

□ 당정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,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여 오늘 논의된 주요 민생정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. 끝.